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2023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주요정보]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이자 ·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하이일드펀드 · 일임 · 신탁 도입 · 시행 (금융위원회)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로-0129 · 등록일 2003
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
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

서울본사
(영등포)

(Sox 서비스) · 금융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고주현 · 안수현 등 75명 등기이사파트너 / 심리실: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두환 · 고영일 · 공희성 · 권창현 · 구수홍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나경수 · 설찬수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박근별 · 배익권 · 송형곤 · 양철성 · 유진우 · 유지운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권일 · 임정훈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제갈원규 · 진수미 · 표정협 · 최영근 · 최영진 · 한상표 · 허근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김태현 · 이현섭 · 배문호 · 송태현 · 최만욱 · 신민석 · 조세용 · 황준호 · 정호신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윤희 · 김현단 · 선지우 · 이원규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현 · 허근 · 황창연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운 · 이상태 · 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운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고경호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명민 · 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호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이원재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만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이승환 · 이희건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외국 · 해외 비즈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과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분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유튜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크리에이터의 세무처리 2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과 일반신고의 비교 4
-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해외국제기구에서 받는 용역대금의 과세방법 6

이달의 특집

- 2023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8

7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 (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 함), 증권등거래세 신고납 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20 (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 (화)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2분 기 신고납부
31 (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 통세(교육세·주행세 포 함), 주세(교육세 포함),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일 용·사업소득간이지급명 세서 제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회계정보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111

경영정보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115
-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31
-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도입·
시행 (금융위원회) 140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6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유튜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크리에이터의 세무처리

- 안세재경저널 2023/6/14일자 통권 1627호(표지)

개념, 구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개념 정의	혼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 · 배포자	인적 · 물적시설 갖춘 영상 콘텐츠 창작 · 유통
업종구분, 경비율	970306(49.7%)	921505(76.2%)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 불필요 (별도시설 최소)	사업자 등록 해야 함 (인적 · 물적 시설)
업종 분류	개인적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정보통신업의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주요 수익	광고수익, 후원금 등	광고수익, 판매수익, 특별광고계약
세무증빙	소득지급자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수취자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주로 부가세 면세사업 (독립적인적용역) + (사업장 현황신고서)	부가세과세사업자로 등록 (부가세 정기신고함)
창업중소기업	개인적 인적용역소득으로 해당 안됨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해당
소득세 감면	1인소득이므로 감면대상 아님	사업수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으로 5년 감면됨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현실	유튜버 초기 진입단계	구독자 증가되면서 인력채용, 설비투자 확장 단계

● 식당 개인사업자 10억 달성 후 법인전환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의
신규 법인설립 자문 사례

- 안세재경저널 2023/6/14일자 통권 1627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 유지	법인전환, 법인설립
설립등기	주민등록으로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
법인방법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① 법인전환 ② 신규법인 설립
법인비용	추가비용 없음	법인당 3년 단위 이사 등기비 30만원 발생
출자분산	개인사업주 100% 전유	출자자본금 분산가능(배우자와 자녀 외는 명의신탁분산주의 : 증여공제 초과액은 증여세 부담)
대표급여	개인사업자 이익 전체가 대표 급여	법인이익에서 대표자 급여 비용처리 (2개법인에 골고루 급여 분산하여 부당행위 예방)
통합손익	사업장이 달라도 개인소득 통합	별도 법인이므로 이익통합 안됨
세금부담	개인사업자 1년 단위 이익 전액에 다단계누진세율 적용	법인이익에서 대표급여(다단계 누진세율) 차감 후 순이익 2억에 9%, 초과액에 19%로 과세이연가능
자금인사	개인이므로 다양한 자금, 인력조달 제한	외부차입, 투자유치, 인력채용시 유리(2개법인 유리)
세무간섭	개인사업자 매출 크면 상위랭킹으로 조사 대상	법인사업자 이면 매출랭킹 하위로 조사가가능성 낮은 편임
미래전략	성장지속하면 결국 법인전환	성장후 합병, 통합, 분할의 유리한 선택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과 일반신고의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3/6/21일자 통권 1628호(표지)*

개념구분	일반적법신고	성실신고확인
업무정의	매년 5월 31일 마감일까지 적법신고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 인증 확인신고
확인방법	자기신고 + 또는 외부조정신고	외부회계사·세무사의 적격인증확인 (사전 세무실사의 개념 : 계정별 적격증빙 확인 입증)
적용범위	대부분 사업자 해당	농업 등 15억 이상, 제조업 등 7.5억 이상,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복수업종	업종별 세무조정	업종별로 성실신고 적용 판단 (각각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해당없음	직접사용금액의 60% ≤총액 120만원 한도
의료비, 교육비	필요경비 아님	세액공제 : 지출액×15%
성실확인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만 적용	세무조정 수수료 + 성실확인수수료 (한도액까지 200만원 내외 적용)
미실행 가산세 등	해당없음(과소신고 20%)	미수행시 산출세액×5% 매출액의 0.02%중 큰 금액
사후관리	부적법 세무조정시 세무조사(징계가능)	부적격수행시 세무대리인 필수 징계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토지·건물양도차익을 종합소득과 별도과세는 납세자에 유리**

- 안세재경저널 2023/6/14일자 통권 1627호(긴급시사해설)

개념구분	사업수입, 사업소득	양도차익, 양도소득
개념정의	매년 발생한 사업활동소득	열거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규정내용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단서에 부동산양도소득은 제외)	좌동 + 소득세법 제94조
소득특성	매년 적극적, 능동적 활동 정규발생	장기간 시세상승누적차익의 일시 실현
적용세율	다단계누진세율(6~45%)	좌동 : 부동산 양도년도 일시과세
소득의 원가	열거된 사업수입의 필요경비 +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비용인정	토지원가 + (건물원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수입금액에 통상적 대응비용(구체적 열거)	취득원가 + 장기보유공제(물가상승공제)
별도과세 이유	1년단위소득에 장기간 누적소득을 합하면 납세자의 최고누진세율이 주로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수익과 구분된 별도소득으로 따로 과세함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차량, 운반구, 기계, 설비, 무형자산 등)	주로 토지 + 감가상각 후 건물가액 등

●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해외국제기구에서 받는 용역대금의 과세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3/6/28일자 통권 1629호(표지)

활동특징	종속근무계약	자유활동계약
소득유형	근로소득 (근로계약)	사업소득 (인적용역계약)
부가세 등	신고의무 없음	영세율 부가세 신고
납세조합	가입가능(세액 5%차감)	좌동
차감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요 적격비용
유불리	적격비용 없으면 적용 가능	적격비용 많으면 유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5년간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해당안됨
외국인 기술자 감면적용	내국인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세액의 50% 감면(5년)	적용안됨
비거주자	국내활동소득만 과세	사업자등록가능

● 조특법 제16조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절세혜택
(유권해석 필요)

- 안세재경저널 2023/6/28일자 통권 1629호(긴급시사해설)

㉓ 적용기한 연장 : 22년말에 2025년 말까지의 출자·투자금액에도 종합소득공제 적용

㉔ 소득공제금액(간접투자) : 벤처·신기술사업조합 등, 벤처투자신탁증권 투자액의 10%

㉔ 소득공제금액(직접투자)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식투자는 : 당년도 투자액 3천만원까지 100%, 3천~5천만원 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액은 30%

㉕ 소득공제연한도액 :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최대한도)

(특정연도 소득이 적으면 향후 2년, 즉 당년과 3년 중에서 소득 많은 1년 선택 신청가능)

㉖ 쟁점 1 : 특정연도에 여러개 벤처기업에 분산투자한 경우도 각 투자액을 합산하여 ㉔ 100%, 70%, 30% 공제 적용 연한도 ㉕

㉗ 쟁점 2 : 특정 벤처기업에만 올해 출자, 내년에 증자, 3년째 추가 증자투자한 경우도 매년 ㉔ 100%, 70%, 30% 소득공제 적용 연한도 ㉕

㉘ 쟁점 3 : ㉔의 조합등 간접투자소득공제는 매년 적용가능

㉙ 결론 : 특정연도에 여러 회사 분산투자와 여러연도에 걸쳐 한 회사에만 출자+증자, 2차증자 투자 등도 모두 ㉔와 ㉕를 적용하여, ㉕한도내에서 종합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해석됨(국세청 유권해석 확인 필요)



이달의

특 집

2023 세금절약 가이드

— 국세청 —

01. 기초 세금상식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의용역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용단(200만 원, m²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 (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1.1.이후), 고급모피 등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 (2014.7.1.이후), 담배(2015.1.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 업 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부 가 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4. 1. ~ 4. 25.	1. 1. ~ 3. 31.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 1. ~ 7. 25.	4. 1. ~ 6. 30.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 1. ~ 10. 25.	7. 1. ~ 9.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 1. 25.	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	1기 확정	7. 1. ~ 7.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 1. 25.	7.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간이)	확정신고	다음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 1.~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중간예납 추계액
개 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물품 제조·수입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 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 업 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10.		1. 1.~ 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해 1. 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2.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① 광업
 -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 ③ 도매업(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04.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 부 세 금	소득세	법인세
세 율 구 조	6 ~ 45% (8단계)	10 ~ 25% (4단계)
납 세 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 장 의 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원칙)	복식부기
외 부 감 사 제 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 등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명장, 대표자확인서(선임서), 재직증명서 등
5.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6. 단체직인(신청서·위임장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
 -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 및 휴폐업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민원증명 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
제공내용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과세유형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유형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변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또는 발급 불가능하게 된 날짜)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신고·납부) -

0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개인사업자
		4. 1.~6. 30.	7. 1.~7. 25.	법인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개인사업자
		10.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12. 31.	다음해 1. 1.~1. 25.

※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7.1. 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

Q1.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실적이 없어 2022년 10월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1. 사업실적이 없어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휴업자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 경로]

①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②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Q2.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022년 1~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하였습니다.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A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1월~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예정부과(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규 간이과세자와 1~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예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	2022. 1. 1. ~ 12. 31.	2023. 1. 25.
신규사업(2022. 3. 1. 개시)	2022. 3. 1. ~ 12. 31.	2023. 1. 25.
폐업자(2022. 10. 31. 폐업)	2022. 1. 1. ~ 10. 31.	2022. 11. 25.
과세유형전환(간이 → 일반)(2022. 7. 1. 전환)	2022. 1. 1. ~ 6. 30.	2022. 7. 25.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부과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3.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 해당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예시) [환산공급대가] 해당 간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인 경우

구분	환산공급대가(공급대가 × $\frac{12\text{개월}}{\text{사업개월수}}$)
9월 1일 사업개시	60,000,000원 ($20,000,000 \times \frac{12\text{개월}}{4\text{개월}}$)
3월 1일 ~ 8월 31일 휴업	40,000,000원 ($20,000,000 \times \frac{12\text{개월}}{6\text{개월}}$)
5월 31일 폐업	48,000,000원 ($20,000,000 \times \frac{12\text{개월}}{5\text{개월}}$)
과세유형전환(간이 ↔ 일반) (7월 1일 전환)	40,000,000원 ($20,000,000 \times \frac{12\text{개월}}{6\text{개월}}$)

Q4. [대손세액공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 일정 대손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text{대손세액} = \text{대손금액} \times 10/110$$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2020년 1월 1일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적용)

Q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나요?

A5.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및 적용기간(개인사업자)

연도	기준금액(공급가액)	적용기간
2020년	3억 원 이상	2021. 7. 1. ~ 2022. 6. 30.
2021년	2억 원 이상	2022. 7. 1. ~ 2023. 6. 30.
2022년	1억 원 이상	2023. 7. 1. ~ 계속

※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이 2023.7.1.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Q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 올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 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A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다음날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오니 변경된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 중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운송업, 운수업, 주차장운영업 등

●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예시) 상품을 1,100,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한 경우

공급가액(공급대가 × 100/110)	세액(공급가액×10%)
1,000,000원	100,000원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부가가치세율(10%)로 계산한 매출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Q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개인사업자)]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 일반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발급세액공제 대상 건수에 포함되나요?

A7.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전송기한 내 수정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송기한 내 전송한 경우에 한함)하면 발급 건수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8.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2023년 1월 신규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실적이 없는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8. 예정과세기간 중 사업을 신규 개시한 법인사업자는 매출·매입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가 된 경우 납부하지고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6개월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등 대상 여부

구분	2023년 1기 예정신고	2023년 1기 확정신고
2023년 1월 1일 신규개업	신고대상	신고대상(2023년 4~6월 실적)
2023년 4월 1일 신규개업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2023년 4~6월 실적)

구분	2023년 2기 예정신고	2023년 2기 확정신고
2023년 1기(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2023년 7~12월 실적)
2023년 1기(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신고대상	신고대상(2023년 10~12월 실적)

Q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예정고지]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 ~ 3월에는 매출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9.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고지는 취소되오니 고지서 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인사업자와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세액)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10.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2022년 6월에 법인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는데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2022년 1기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0.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오니 경정청구 시 가산세를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2022. 2. 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1년 이내

(개정전) 2019. 2. 12. ~ 2022. 02. 14.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6개월 이내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상세내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매 입 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하였더라도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세액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 이하, 경형승용차는 제외)의 구입·임차·유지하는데 발생한 매입세액 -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업종에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매입세액)을 납부세액(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3년 5월은 지난 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별지 제40호 서식)*를 합니다.
- 퇴직 · 양도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별지 제40호의2 및 제84호 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2023년 신고분)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2022. 1. 1.~12. 31.	2023. 5. 1.~5. 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2. 1. 1.~12. 31.	2023. 5. 1.~6. 30.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2022. 1. 1.~사망(출국)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2023. 1. 1.~5. 31.중 사망(출국*)시	2022. 1. 1.~12.31. 2023. 1. 1.~사망(출국)일	

* (출국자 구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1.1.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종교인소득 (2018.1.1.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 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 1.~5. 31.(성실 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 1.~6. 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천만 원을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2개월 이내

◆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1)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천만 원을 초과

2)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비과세 :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 국외원천 이자·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제공합니다. 금융소득자료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자료 제공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인증수단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금융소득자료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요청 방법 :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 경우 : 금융회사 등에서 국세청에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국가기관 등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Q3.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A3.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장부의 요건 (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 (소득세법 제56조의2 ②)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Q4.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A4.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 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 *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 2009년 ~ 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②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74호 서식)
 - ③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 ④ 기타 부속서류
 - ※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Q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A5.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Q6.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A6.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억5천만 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하며, 1개의 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가능 계좌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불이익

1)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소득세법81조의 8)

가) 미사용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나) 미신고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Max -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과세기간의 거래금액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용계좌 관련 의무 미이행 시 배제되는 감면(예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

• 상가임대료를 인한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의 3)

※ 예시 외 적용배제되는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참고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용계좌 사용·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7.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보증금·전세금
1 주택	· 아래 주택만 과세 - 국외주택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 과세 안 함
2 주택	· 모든 주택 과세	· 과세 안 함
3 주택 이상	· 모든 주택 과세	·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 非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 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 ① (1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 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② (2주택)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③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 *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 *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
 - ① (월 세)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②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Q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 렌트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가능
-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홈택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불필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③)
- (민원인) 주소지(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먼저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으로 온라인 통보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화면에 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Q9.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9. ①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참고) 2023. 1. 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선택적 분리과세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고를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

●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Q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10. 아래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연간 300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건부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 2) 무조건 종합과세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이란?

-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소득 외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대체로 일시적·우발적 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 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 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 대상자 :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7.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 대상자 :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

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식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거울·액자(내용물 없는 것)·주방용 유리 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은 2016. 7. 1

	부터 의무발행업종이며, 그 외 제품은 2023. 1. 1. 거래분부터 의무발행업종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밀줄 친 업종은 2023. 1. 1.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 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 12. 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누리집「hometax.go.kr», 스마트폰「구글스토어/애플 앱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앱」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05. 원천세 신고 · 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 1.~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임주 지체상금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 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Q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 대상인 비과세 항목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출대상 비과세와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있습니다. 생산직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 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 시 면제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Q2.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Q3.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 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간이세액표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Q4.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A4.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Q5.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개인이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법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A5.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임을 받은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팀-337,2008. 03. 14.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714, 1999. 02. 05)을 참고하기 바람.

Q6.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21의2]

Q7.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을 잘못적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7.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상 지급액을 잘못적어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Q8.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언제부터 상용 근로자로 보나요?

A8.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

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 1 ~ 12. 31.까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Q9. 기타소득이 건별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9.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없는자에 대해서도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 품등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여부**

-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Q10. 폐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하나요?

A10.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10.까지

제출하는것이나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과소신고 · 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제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2% × 경과일수
-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 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 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 · 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자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5. 31.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를 위한 세금(연말정산) -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연 간 급 여 액
(-) 비 과 세 소 득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근로소득공제(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원

• 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36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억7,406만원
10억원 초과	45%	3억8,406만원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기타 :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타 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개인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12. 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td>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td></tr> <tr> <td>7천만 원 ~ 1억2천만 원</td><td>250만원</td></tr> <tr> <td>1억2천만 원 초과</td><td>200만원</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저축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등

구 분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는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6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총 900만 원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특별 세액 공제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 ② (㉠, ㉡ 중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 세액공제율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 원 초과분 30%) - 2022년 말까지 공제율 한시적 상향(15%→20%, 30%→35%)
	표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7%)

02.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공제시기

-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 일시에 납

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03.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text{총급여액} = \text{연간 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text{의료비총액} - (\text{총급여액} \times 3\%) = \text{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0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 인	직 계 비 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 계산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합계 : 350만 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05.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 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20.3.13.~2021.3.15.까지 : 1.8%)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 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 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 원, 30년 이상 : 연 1,500만 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 원, 15년 이상 : 연 1,000만 원 한도)

※ 2014년~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 원)을 적용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 2009. 2. 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 2014. 1. 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0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 (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40%(80%)

-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2022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 · 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분)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 · 대중교통, 도서 · 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③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30%
 - ④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 ⑤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충급여액의 25%) ≤ ① : 최저사용금액 × 15%
-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 × 15% + (최저사용금액 - ①) × 30%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 × 15% + (②+③) × 30% + (최저 사용금액 - ① - ② - ③) × 40%

⑦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⑧ 2022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 · 직불 · 기명식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로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 · 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08.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6%~45%)
산 출 세 액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급) 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 제 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 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과 세금

-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소득세법 부칙 (11611호, 2013. 1. 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환산급여}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 - \text{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2023.1.1.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8백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천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천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천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div 12\} \times \text{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 12. 23.)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㉗}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 (\text{㉘}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㉗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60%	40%	20%	0%
㉘ 2016. 1. 1. 이후 계산방법	40%	60%	80%	100%

다. 세율(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 400만 원 이하	6%	—
5천만 원 이하	15%	1,25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09.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습니다.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 원, 2014.1.1.~ 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p>※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p>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A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조특, 원천세과-428, 2012. 08. 17.

[제목]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요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Q2.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은 차감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2년과 2023년 중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A2.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한 2022년 귀속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Q3.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A3.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할 때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의 산정방법

-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Q4.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적용하고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그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나요?

A4. 교육비,의료비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등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자녀를 위해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분이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공제적용은 가능한 것이나,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2007.11.06.

[제목]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Q5. 연도 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5.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전(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Q6.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이 가능한가요?

A6.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중 간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Q7.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데 회사가 부도, 폐업한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신청경로 안내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Q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세대원은 불가능한가요?

A8. 세대원인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Q9.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Q10. 월세세액공제 시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나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10. 월세세액공제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혹은 일정요건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만약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12. 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0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¹⁾ 와 부양자녀 ²⁾ , 70세 이상 직계존속 ³⁾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⁴⁾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 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계산해보기」에서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① 홈택스(PC, 모바일앱)
 -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 1. ~ 6. 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를 차감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반기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3년 귀속분)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text{상반기총급여} + (\text{상반기총급여} \div \text{근무월수}) \times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text{상반기총급여} \times 2$

-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 3. 1.~2023. 3. 15.	2023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 9. 1.~2023.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1.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확인 가능하며, 러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의 발송

서면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말부터, 모바일안내문은 5월 2일부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유형	신청 방법 안내
서면 안내문QR코드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하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하단에 '열람하기' 누르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안내문이 열리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자동응답(ARS) 1544-9944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① 신청 >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로그인 (모바일앱 · PC)	신청/제출 > (PC: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신청대리(상담센터)	민원인이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민원인의 동의 받아 상담사가 직권으로 신청

※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기한 : 신청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 사실의 통지 및 환급 :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시기별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기간	환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5일	2023년 8월 중	산정액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022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내	산정액

* 20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A3.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에 따라 신청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가구 내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조특령 §100의7④)>

-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Q4.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2④제1호)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②제7호)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Q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대상 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여부는 해당 신청기간 초에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Q6.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
제출 · 허위제출 신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
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거자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의7)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
장이 정하는 자료

▶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국세청 고시 제2022-5호)

1.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5.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6.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고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
거자료 고시」

[조회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고시 ⇒ 장려세제

**Q7.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 하나
요?**

A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00조의6 ②)>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
득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소득)
- 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3)	총급여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
구성 및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유형의 구분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Q8.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8.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1세대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의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Q9.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9.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10.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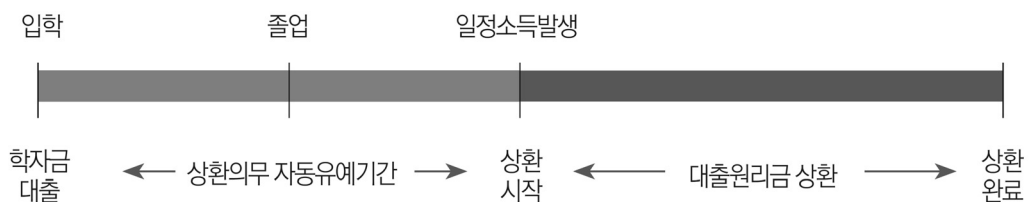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출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입생은 대학 입학허가 획득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48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 대출 당시 만 40세 이하

◆ 대출한도

- 학부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 생활비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학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석사과정* 9천만 원, 박사과정**1억 2천만 원 한도)
 - * 석사과정: 일반 · 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전문/의 · 치의 · 한의계열 9천만 원
 - **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일반 · 특수/전문기술석사 9천만 원, 전문/의 · 치의 · 한의계열 1억2천만 원
 - 생활비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금리

- 교육부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고시
 - 2023년 1학기 : 1.7%
 - * 2018년 1학기~2019년 2학기 : 2.2%, 2020년 1학기 : 2.0%, 2020년 2학기 : 1.85%,
2021년 1학기~2학기 : 1.7%

◆ 의무상환액

-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 × 상환율2 -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상환액3)

1)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2) 상환율 : 20% 또는 25% ('22년까지는 20%로 일괄적용)

①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②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③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3) 소득 귀속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함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4년 통지 시 적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상속·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제외

◎ 의무상환 방법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 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 원천공제 통지액을 미리 납부(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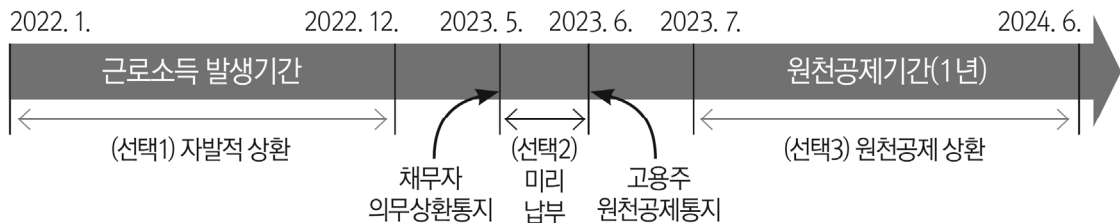
◆ 고지·납부 대상자

-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자율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시행)

<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선택 >



◎ 상담 및 문의

- ◆ 국세상담센터 : ☎ 126번 ☎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 4번 '학자금 상환' 선택

-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누리집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 본 공 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과세저축은 제외)
 -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증여세 경감 혜택

-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 세액공제(한도: 소득금액 x 30%)
※ 단,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 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최대 1억 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 세액공제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3,600만 원(일반기업 : 1,200만 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고용유지·증대 지원	• 고용 유지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직·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천만 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5~0.5%) 10% 한도 (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초과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3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중소기업 최대 40%)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중소기업 최대 50%)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3%(중견 기업 5%,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6%(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 (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 2021. 1.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2020년, 20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 원~2만 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고용 증대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300만 원, 중견기업은 450~900만 원, 일반기업은 400~500만 원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850 ~ 1,450만 원, 중견기업은 450 ~ 800만 원, 일반기업은 400만 원 세액공제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①~③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2022. 12. 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② 2020. 1. 1. ~ 2025. 12. 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5천만 원 이하
- ◆ (특례 내용)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 (신청기간) 2020. 1. 1. ~ 2026. 12. 31.

- 납세자 보호 제도 -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상 우대혜택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 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 · 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최대 50억 확대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2년간)

◆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 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콘도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 포함하여 제공)

- 소노인터내셔널(舊대명리조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호텔을 비수기(콘도별 성수기를 제외)에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선정일로부터 3년간)

02.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 ◆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부여일정	매년 3월 부여(전 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단,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 ◆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사용혜택

구 분	상 세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제공(3p 사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수목원 입장료 20% 할인 제공(3p 사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10~20만 원	20~30만 원	30~40만 원	40만 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 쇼핑물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화면에서 입장하기 클릭

03.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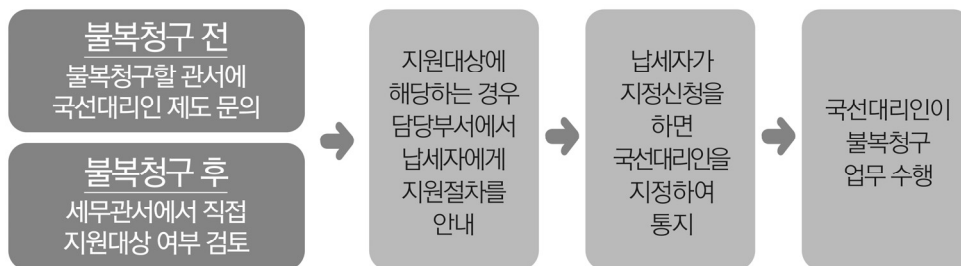
-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업무관리 담당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제공되는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신고 대리 서비스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6.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심의 대상

세무서 · 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 위원회
①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재심의 ①②③
②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③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중소규모납세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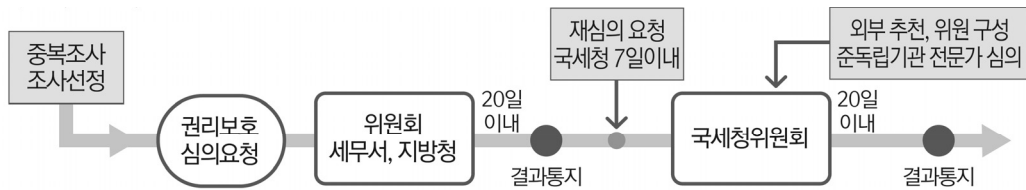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 · 법률 · 회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 · 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 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심의 절차



07.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ombudsman(ombudsman) 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변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08.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권한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 ◆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 (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행정소송

-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고충민원

-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위원회 -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

이에, 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최선추정부채(BEL)가 줄어드는 효과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新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내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적립하며,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既적립된 보험계약마진(CSM)을 일정 비율*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text{보험계약마진수익인식}_t = \text{보험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t} \text{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k}}$$

그러나,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

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위험)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준비금(버퍼)을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으로 적립한 후, 매 결산 시마다 위험조정을 재산출하여 기말·기시 증감액(기시 위험조정 - 기말 위험조정)만큼 상각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기시 위험조정 - 기말 위험조정)이 크게 계상(☞ 당기이익 증가)될 수 있다.

- * 기말 시점의 위험조정 계산 시, 기시 시점 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험회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빠르면 '23.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 *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23.9월말 결산부터 적용

또한,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 * 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

별첨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案)

-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
(☞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 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
*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단, 최소 한국 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案)

-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를 추정(☞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을 반영
*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案)

-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
- ◆ 납입완료 직전 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 행동 가정) 반영 필요
*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0"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案)

- ◆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

1. 개 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6.22일(목)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국정과제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 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내부통제에서는 경영진의 의지(tone-at-the-top)가 중시 →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임직원 교육·훈련 등을 가치를 공유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과적 전략수립 필요

한편, 평소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 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즉,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으로서, 금번 제도개 선은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되었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 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 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3.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일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 이 중요한 만큼, 금융권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 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경영진 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내부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회사들도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1. 현행 금융권 내부통제 규율 및 운영상 문제점

- 現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16년~)
 - * (지배구조법§24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절차와 기준들을 다수 열거
 - 기준 未마련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기관제재, 관련 의무 미이행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신분제재 등 조치 부과
 - ※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법 § 27)
-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 빈번
 - * DLF, 라임·디스크버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 대규모 횡령 등
- 근본적으로 현행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 존재
 - ① (책임소재)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이, 사전에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
 - 금융회사 내 위임전결 등에 따라 직무권한이 위임된 만큼, 내부통제 책임도 위임된 것으

로 오해

-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이사(CEO)조차 조직내 내부통제 의식 (tone-at-the-top) 고취보다 성과중심 경영에 치중
 - 실제 내부통제 위반사건 처리과정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통제 노력을 설명하기보다,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소명
- ② (규율내용) 現법령은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未규율
- 금융회사는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의 외형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어, 실제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기대하기 곤란
 - 금융회사들은 각社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업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빈번
 - 통제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정도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례*에도 불구,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 (우리은행 DLF제재 2심판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함"
- ③ (이사회 역할)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이사회의 역할도 미미
- 경영진 감시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적정성을 지속 점검·보완하는 노력 필요
 - 반면, 현실에서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거수기", "경영진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
 -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이 큰 상황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논의경과

- ① 정부는 내부통제 기준마련외 기준 준수여부 등 의무도 부과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既제출('20.6월)하였으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 ② 반복되는 금융사고, 임직원 횡령 등을 계기로 "금융권 관행 개선"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22.11월)하고, 업권별 TF 운영
- ③ '22.8월부터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 '22.8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 논의 → '22.11월 TF 중간논의결과 발표 → 이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 금번 방안 마련

II. 내부통제 제도개선 기본방향

◆ 내부통제 규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유도 → 금융권 신뢰회복참고1

- ①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
 - 경영진이 실제 업무수행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된 업무에 대한 통제·관리 책임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
 - 각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속 직원의 업무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유도
 - ☞ 권한은 위임 가능하나, 책임은 위임하지 못한다는 원칙 구현
- ② 내부통제 기준마련뿐 아니라 운영·준수 등 일련의 과정(process)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
 -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점검, 미흡사항 개선 등 단계별로 관리조치 실행
 - 충분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하급자에 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경영진의 제재수준 감경·면제 가능
 - ☞ "알 수 없었다"는 변명이 아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명
- ③ 이사회와 내부통제 책임 명시
 - 내부통제의 최종(ultimate)책임이 있는 이사회와 내부통제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감독·감시)
 - 내부통제의 미흡·실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들의 이사회에 대한 책임추궁 활성화 여건 조성
 - ☞ 「경영진 ↔ 이사회 ↔ 주주」의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의 원활한 작동 유도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구 분	현 행	개 선
책임소재	▶ 책임소재 불분명	▶ 각 경영진별 책임영역 사전배분
규율내용	▶ 내부통제 기준마련에 한정	▶ 내부통제 일련의 과정 전체 포함
이사회 역할	▶ 이사회 책임의식 미미	▶ 이사회 최종 책임 명시

Ⅲ. 내부통제 제도개선 세부방안

◆ 금융사 임원은 ①책무구조도상 책임영역별로 ②내부통제 관리→ ③이사회 사전적 감시 및 ④감독당국의 사후제재로 실효성 제고

1. 책무구조도 (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①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②책무(responsibility)를 ③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

① (대상) 「지배구조법」상 임원*(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통상 C-레벨**)

* 회사의 규모, 해당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토록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예: 임원의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일부 직원도 임원급으로 추가 가능)

** CEO, CRO, CCO 등의 직책으로, 대형은행 기준 2~30여명 수준

－ 다만, 상근경영진 대비 사외이사의 제약된 정보접근성 등을 감안,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우선 제외

*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정보접근성 및 업무시간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고, 개별 이사에게 부여되는 상법상 감시의무의 범위로 책임영역을 한정

② (책무)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

－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영역은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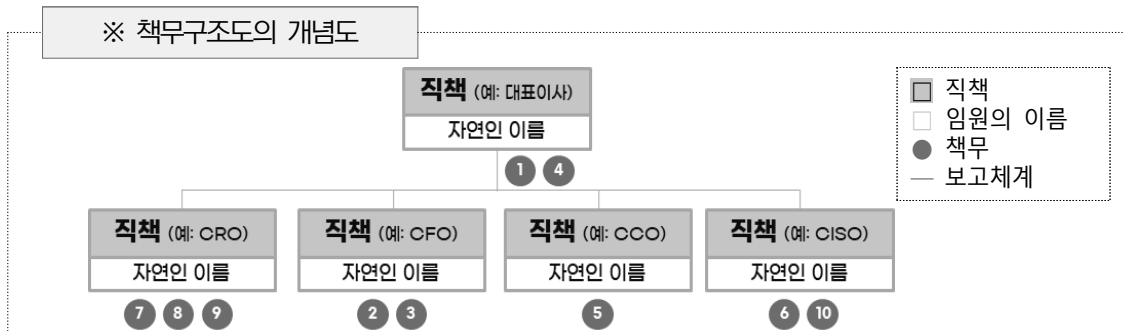
* ①경영관리, ②위험관리, ③영업 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열거

※ (해외사례참고2) 영국 FCA는 (i) Prescribed 및 (ii) Overall responsibilities 제시

(i) (Prescribed) 금융범죄 방지, 임직원 교육, 내부감사·준법·위험관리 업무 등

(ii) (Overall) 청산·결제, 투자관리, 금융·투자자문, 기업/개인 투자상품 개발·판매, IT등

③ (배분)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책무)을 지정



□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

-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요건 외에 책무 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

*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

- 금융회사는 임원의 신규 선임시 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시에도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의무

※ 직책·책무 변경시 담당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구분	〈 현행 〉	〈 개선 〉
임원의 자격요건	소극적 결격요건만 열거 (*사외이사만 적극적 자격요건)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 추가
자격요건 확인	임원의 신규선임 시에만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임원 신규선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既선임된 자의 직책 변경 시에도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영국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임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면밀히 연계하여 운영참고3

□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CEO)가 마련*

* 책무구조도상 CEO의 책무에 "책무구조도 작성" 포함 예정

-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

* 한 명의 임원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회사내 모든 주요 책무를 적용대상 임원에 대해 "중복없이, 빈틈없이" 배분 필요

-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

- 책무구조도 최초 작성 및 주요사항 변경*시 감독당국에 제출
 - * (예) 인사로 직책 담당 임원이 변경되거나, 영위업무 변화로 책무가 신설·폐지되는 경우 등
- 감독당국으로부터 그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는 것이 아님
 - 다만,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 가능

2.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내부통제 관리의무란,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의미
 - 관리조치는, 소관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임원이 소속직원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의미
 - * (예) (i)기준 마련의 적정성 점검, (ii)운영의 효과성 점검, (iii)기준 준수여부 점검, (iv)미흡사항 파악·대응·개선, (v)주요사항 이사회 보고 등
-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명확히 규율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의식 고취
 - * [대법원 2021.11.11.선고 2017다222368 판결]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각社별 사업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
 - *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framework) 구축과 전반적인 임원 통제활동의 적정성 점검 등에 대해 책임 → 모든 세세한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님
 -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책임

3.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
 - 이사회는 회사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부담
 - * (BCBS)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유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ultimately responsible)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있음
 - 책무구조도상 개별 임원은 소관 영역별로 구체적인 관리조치(management)를 취하며,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를 감시(oversight)

-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 현재도 내부통제위원회가 있으나, CEO 및 관련 경영진으로 구성
- 내통위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
 - 아울러 내통위는 책무구조도 적용대상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가능
- 내통위는 필요시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기존 이사회 내 소위원회와 통합운영 허용

4. 제재 및 면책기준

-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未실행하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하여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 부과
 - *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임원)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업무집행책임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요구
-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
 - *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므로, 현행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감독자-지시자-보조자" 책임은 별도로 묻지 않을 예정
-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 경감 또는 면제
 - "상당한 주의"는 사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로 판단
 - 관리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수준 등은 각 회사 및 업계에서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
 - 제도시행 前·後로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속적으로 업무영역별 "Best Practice*"를 집적(集積)할 예정
 - * (예) 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월)
 -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을 명시할 예정

※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사항 (예시) [주요사례참고4]

- ▶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예산·인력·시간의 투입수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여부,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적 감사 또는 외부평가 실시여부, 내부통제 개선노력 및 성과, 사고발생 예방 및 후속조치, 관련 문서·기록 관리·유지,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협조 수준 등

- 당국이 관리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임원에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리 정하여 공개(금융위 고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일관성 제고
 - 사고발생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移行) trigger" 기준 설정
 - －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

※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 trigger" 설정시 고려요인(예시)

- ① (위법의 양태) 해당임원의 위법행위 방지·조장·지시 여부 등
- ②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수준) 과거 유사사건의 발생 여부,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한 외부 경고, 민원·언론 등의 집중적·반복적 문제제기 등
- ③ (위법행위 결과의 중대성) 피해규모, 가담인원의 규모, 위반의 지속기간, 반복성 등
- ④ (위법행위의 파급효과) 금융시장 파급 정도, 시장질서의 훼손수준, 위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금융회사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신뢰 훼손정도 등

IV. 제도 시행방안

- ① (추진일정) 방안발표 이후,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업계 의견수렴 과정 지속 후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 ② (적용대상별 적용시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업권별로 단계적 시행
 - [1단계] 은행·금융지주(공포후 1년 이후)
 - [2단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공포후 1년6개월 이후)
 - [3단계] 일부 지배구조 규율이 未적용*되는 중소형 금융회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 *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소수주주권 행사 등

※ 업권별 적용시점

(구분)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지배구조법 전체적용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 종투사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일부 규율 적 용배제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자산총액 5조원미만	자산총액 5조원 ↓	자산총액 7천억 ↓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③ (특칙) 해당 회사가 아닌 他社 임원이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영향력을 미치는 해당 임원도 책무구조도에 표기

* (예)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 → 자회사 책무구조도에 반영,
글로벌 본사에서 외국금융회사에 실질적 영향력 → 외국금융사 책무구조도에 반영

※ 동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변경되어 입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기업지배구조상 내부통제의 역할 및 필요성

- 내부통제는 회사가 직면한 제반 위험의 관리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임직원이 준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지칭
 - 법률위반과 관련된 준법위험뿐만 아니라, 회사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목적
 - 조직 구성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위험규모와 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

※ 내부통제의 개념 및 정의

▶ (COSO*) "운용, 보고, 법규준수에 관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

*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개념도입('04.1월)을 통해 내부통제의 개념범위 확대

○ ①통제환경, ②위험평가, ③통제활동, ④정보·의사소통, ⑤모니터링 등 5대 요소로 구성

▶ (BIS) "은행의 조직 및 영업구조를 규율하는 규정 및 통제장치"

- 동시에, 내부통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내 주인-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인

감시장치로서 역할

- 수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프로세스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자의 업무처리가 위임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유도
 - * 주주(주인) - 회사(대리인) / 이사회(주인) - 경영진(대리인)
- 내부통제를 충실히 구축·운영한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보호막으로도 작용
 - 임원진의 적극적 의사결정행위가 경영판단원칙*으로 보호받듯, 내부통제원리를 통해 감시의 무 위반에 대한 면책 가능
 - * 의사결정 당시 최선으로 보이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개별 경영진 또는 이사에겐 법적책임을 묻지 않음
- 마지막으로, 외부통제의 내부화를 통해 외부장치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내부 위법행위를 포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절감 가능
 - 경직적인 외부규제가 포착하지 못하는 회사 고유위험을 스스로 조기에 식별·대응토록 하여 규제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

참고 2. 영국 FCA가 정한 책무의 종류

Prescribed Responsibilities (지정책무)	Overall Responsibilities (총괄책무*)
A. 회사 고위경영진제도 이행 B. 회사 직원인증제도 이행 C.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규제 요건 준수 D. 금융범죄 관련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절차 (내부고발자 총괄, 행위규칙 교육·보고) E. 관리책무(Prescribed responsibilities)의 배분 F.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업무안내,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정책·절차 G. 고위경영진(이사회 제외)에 대한 업무안내,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정책·절차 H. 일상적인 회사경영에 있어서 조직문화의 수용여부 감독	1. 지급업무 2. 청산·결제업무 3. 투자관리 4. 금융투자자문 5. 모기지 자문 6. 기업금융 7. 기업 투자상품 판매 8. 개인 투자상품 판매 9. 고객계정 거래 10. 시장조성 11. 투자 관련 시장조사 12. 발행인수

Prescribed Responsibilities (지정책무)	Overall Responsibilities (총괄책무*)
<p>I. 회사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 나갈 이사회의 책무</p> <p>J. 내부감사업무 감독 및 독립성 보장</p> <p>K. 준법감사업무 감독 및 독립성 보장</p> <p>L. 리스크관리업무 감독 및 독립성 보장</p> <p>M. 보수 정책·절차의 이행 및 개선 감독</p> <p>N. 내부고발(내부고발자 보호 포함) 관련 회사의 정책·절차의 독립성, 자율성, 효과성</p> <p>O. 회사의 자금조달, 유동성의 배분·유지</p> <p>P. 회사의 재무경영</p> <p>Q. 금융정보의 생산 및 규제활동 보고</p> <p>R. 회사의 회생 계획 및 지배구조 관련 내부절차 감독</p> <p>S. 내부 스트레스테스트 및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 관리</p> <p>T. 회사 사업모델의 개발과 유지</p> <p>U. 비집행이사의 적격성 의무</p> <p>V. 고유자산 투자활동 관련 책무</p> <p>W.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없는 경우) 리스크 정책·절차의 규제기준 준수 감독</p> <p>X. (내부감사 외부위탁시) 수탁회사 직무 수행자가 외부감사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책무</p> <p>Y. 소매금융과 투자금융의 분리규제(Ring-fence rule) 준수에 대한 책무</p> <p>Z. 고객자산 보호(CASS) 준수 책무</p>	<p>13. 개인여신 취급여부 결정</p> <p>14. 기업여신 취급여부 결정</p> <p>15. 기업고객 상품 개발</p> <p>16. 개인고객 상품 개발</p> <p>17. 마케팅 자료의 생산 및 배포</p> <p>18. 고객 AS서비스</p> <p>19. 고객 불만응대</p> <p>20. 채권회수</p> <p>21. 미들오피스</p> <p>22. 정보·IT</p> <p>23. BCP</p> <p>24. 인력 개발·관리</p> <p>25. 회사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p> <p>26. 금융시장지표 산출을 위한 데이터 입력</p> <p>27. 금융시장지표 관리</p>

* 각 금융회사별 특성,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 스스로 지정필요(FCA는 예시적으로만 제시)

참고 3. 영국 고위경영진 인증제도

(Senior Management & Certification Regime)

□ (의의) 英FCA에서 시행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로, FSMA법에 의해 승인받고 FCA 규제를 받는 모든 회사에게 적용

* ('16.3월) 은행·주택금융조합·신탁·대형투자회사 → ('18.12월) 보험사 → ('19.12월) 기타 금융회사

○ 대상회사는 규모, 복잡성,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제사항(수준) 차등 적용

* Enhanced firms(규제 추가적용) - Core firms - Limited Scope firms(일부규제 완화)

- 고위경영진 책임제도는 회사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는 회사 경영진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 고위경영진 직책Senior Management Function*을 수행하려는 임원은 감독당국(FCA·PRA)으로부터 적격성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예) CFO, CRO, 내부감사, 리스크위원회 의장, 감사위원회 의장, 보수위원회 의장 등
 - ※ 고위경영진은 감독당국이, 주요 직원은 회사 스스로 적격성 심사
 - 고위경영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책무가 사전적으로 배분·할당 → 최소한으로 배분되어야 할 책무의 종류는 당국이 열거적 제시
 - (지정책무Prescribed Responsibility) 회사 경영전반을 아우르는 기능적 책무 →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예: 준법, 교육 등)
 - (총괄책무Overall Responsibility) 개별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종류·성격에 따른 책무 → 업권별·회사별 사정에 따라 상이
 - 금융회사는 고위경영진이 담당하는 직책과 책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임명세서Statement of Responsibilities 작성(임원별 작성)
 - 금융회사는 책임명세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형태로 작성
- 고위경영진은 부여된 역할 및 소관 책임영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의무 Duty of Responsibility 부담
 -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는, 통상 그 직책에 있는 자라면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 reasonable actions*를 취했는지 여부로 판단
 - * (고려요인) 해당 지위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사항인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위임된 권한을 적절히 모니터링했는지 여부 등

참고 4. "상당한 주의"판단시 관련 참고사례 (예시)

〈영국〉

▶ 고위경영진의 "상당한 조치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DEPP 6.2)

▶ 위반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파급력	고위·중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및 빈도, 위반행위의 결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소관영역의 내부통제/경영시스템상 허점 여부,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소비자 또는 시장참여자에게 미치는 손실 또는 위험의 크기,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여타 금융범죄의 특성 등
▶ 위반행위 이후 행위자의 행실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숨김없이 위법행위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렸는지 여부, 조사단계에서의 협조 정도, 위반행위 이후 담당자가 취한 교정·보완 조치,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유사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등
▶ 행위자의 과거 제재 또는 준법 이력	금융회사 및 담당자에 대한 과거 제재조치 이력 등
▶ FCA 가이드라인 등의 준법 여부	
▶ 유사 사례에 대한 FCA의 제재조치 선례	

〈미국〉

▶ 미국 연방양형가이드라인 "상당한 주의 인정요건"

- * ① 법준수의 기준과 절차의 확립,
 ② 회사 경영진의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이해와 효과적 실행을 위한 합리적 감독,
 ③ 과거에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 담당 임직원에서 배제, ④ 회사내 모든 구성원에게 회사의 법령준수 기준과 절차를 교육,
 ⑤ 기준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감시·감사시스템,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
 ⑥ 적절한 인센티브·징계제도를 통한 법준수프로그램 촉진·강제,
 ⑦ 법령위반 사항 발견시 적절한 대처 및 프로그램 수정

〈국내〉

▶ "상당한 주의"를 활용한 입법례: 민법상 사용자책임, 양벌규정, 관리·감독책임

- * (민법§756)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본시장법§422)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 (소비자보호법§57) 다만,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 양벌규정 :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관련 판례

- * ① 법률의 입법취지, ②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
 ③ 그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의 취지,
 ④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실제 피해결과 및 피해정도,
 ⑤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 지휘감독 관계,
 ⑥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1.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구 분	일반 주식회사	상장회사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벤처기업
근거	▪ 상법 제340조의2-4	▪ 상법 제542조의3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6
부여 대상	▪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관계회사의 임직원	▪ 임직원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특례 ▪ 외부 전문가 특례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50% 이내 특례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선 10% 이내)
행사 가격	▪ (신주발행)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 & 권면액 이상 가능) 특례 ▪ (자기주식) 시가 이상
임직원 세제 혜택 (조특법)	▪ 없음	▪ 비과세특례(16조의2)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과세 특례 적용 ▪ 납부특례(16조의3) 상장 벤처기업도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 비과세특례(16조의2) 특례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단, 비과세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 별 최대 5억원 ▪ 납부특례(16조의3)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 과세특례(16조의4) 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소 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 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 5억원 이하

참고2.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

- ①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②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③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

전문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연구원
 -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8.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9.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10.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1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④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이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연구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2.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고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생략)</p> <p>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 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4. (생략)</p> <p>③ ~ ⑪ (생략)</p> <p>● 제4조 【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 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p> <p>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p>	<p>●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14. (현행과 같음)</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p>● 제4조 【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p> <p>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p> <p>② 법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p>

(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text{부여 당시 시가} - \text{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text{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text{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

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❶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밤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❶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신 설>

❶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❷ 제11조의5 ~ 제11조의9 (생 략)

❶ 제11조의10【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9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❷ 제11조의11 ~ 제11조의13 (생 략)

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❶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❶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❷ 제11조의8 ~ 제11조의12 (현행과 같음)

❶ 제11조의1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❷ 제11조의14 ~ 제11조의16 (현행과 같음)

<p>❶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 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p> <p>2. 삭 제</p> <p>3. (생 략)</p> <p>②·③ 삭 제</p> <p>④ ~ ⑥ (생 략)</p> <p>❶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1. ~ 3의2. (생 략)</p> <p>4. ~ 6. 삭 제</p> <p>6의2. 제11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p> <p>6의3. 제11조의7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p> <p>7. 제11조의9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p>	<p>❶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 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p> <p>2. 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삭 제</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❶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1. ~ 3의2. (현행과 같음)</p> <p>4. ~ 6. 삭 제</p> <p>6의2. 제11조의9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p> <p>6의3. 제11조의10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p> <p>7. 제11조의12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도입·시행

- 금융위원회 -

1. 주요 경과

다가오는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가 2017년 종료되었던 바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 세제지원은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2. 대상 및 요건

(1) 하이일드펀드 요건(※ 관련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 5.10일~19일)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하였다.

(2) 투자자 요건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법 시행일('23.6.12.)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3. 기대효과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작년 말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2조원의 70% 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하였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하였다.

금융투자협회는 금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4.27.)하여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였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이에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이일드펀드 세부 요건

- (가입조건) 누구나 가입 가능(단,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
- (계약기간) 1년 이상
- (투자대상) 공모 : BBB+등급 이하(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이상, 국내채권 60% 이상
사모·일임·특금 : BBB+등급 이하(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이상,
A등급(A2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 (세제혜택)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3천만원
 - (기간) 가입일로부터 3년간

참 고. 주 요 Q&A

1.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일드펀드에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3.6.12일부터 '2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부여되며, 가입 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에 가입했던 하이일드펀드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가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시행일 이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새롭게 납입하면,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 연 수익률 5% 가정시 최대 약 153만원*,
 - 연 수익률 6% 가정시 최대 약 184만원,
 - 연 수익률 7% 가정시 최대 약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이자소득) 3,000만원 투자 × 연 5% 수익 × 3년 ⇒ 450만원
(세제혜택) 3,000만원 투자 × 연 5% 수익 × (최고세율 49.5% - 원천세율 15.4%) × 3년
⇒ 153.4만원

4. 하이일드펀드 가입요건이 따로 있는지?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 ☐ 하이일드펀드는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고, 가입 금액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거주자여야 하며, 하이일드펀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가입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 1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여러 하이일드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계좌를 합산하여 1인 당 총 가입액 3천만원 한도로만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A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한 뒤 B펀드에 2천만원을 추가 가입하더라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 가입 1년 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따른 세금 절감액이 추징됩니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일(목)	6월 2일(금)	6월 5일(월)	6월 7일(수)	6월 8일(목)
미 달 러 (USD)	1321.60	1320.70	1308.80	1308.30	1300.50
위 안 화 (CNH)	185.92	185.58	184.32	183.99	182.46
일 본 엔 (JPY)	950.01	951.75	934.02	937.28	928.63
유 로 화 (EUR)	1413.39	1421.54	1400.55	1398.97	1391.21
영 국 파 운 드 (GBP)	1644.93	1654.51	1627.56	1625.43	1617.43
캐 나 다 달 러 (CAD)	974.06	982.37	974.82	976.23	972.37
홍 콩 달 러 (HKD)	168.78	168.65	167.00	166.81	165.86

통 화 명	6월 9일(금)	6월 12일(월)	6월 13일(화)	6월 14일(수)	6월 15일(목)
미 달 러 (USD)	1306.10	1294.90	1291.10	1277.50	1275.90
위 안 화 (CNH)	182.72	181.78	180.59	178.19	177.98
일 본 엔 (JPY)	940.69	928.81	925.75	911.49	911.00
유 로 화 (EUR)	1408.50	1391.50	1389.55	1378.55	1382.18
영 국 파 운 드 (GBP)	1640.72	1628.47	1615.75	1610.80	1615.67
캐 나 다 달 러 (CAD)	977.88	970.80	965.92	959.55	957.34
홍 콩 달 러 (HKD)	166.67	165.19	164.78	163.08	162.94

통 화 명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일(수)	6월 22일(목)
미 달 러 (USD)	1280.10	1273.50	1280.70	1282.20	1291.50
위 안 화 (CNH)	178.67	179.66	179.46	178.29	179.54
일 본 엔 (JPY)	913.48	897.49	902.31	907.46	911.50
유 로 화 (EUR)	1401.84	1393.53	1398.84	1400.35	1519.68
영 국 파 운 드 (GBP)	1637.25	1634.03	1639.36	1636.60	1649.50
캐 나 다 달 러 (CAD)	968.60	965.50	969.53	969.31	981.46
홍 콩 달 러 (HKD)	163.66	162.84	163.85	163.85	164.98

통 화 명	6월 23일(금)	6월 26일(월)	6월 27일(화)	6월 28일(수)	6월 29일(목)	6월 30일(금)
미 달 러 (USD)	1291.40	1302.20	1303.80	1303.10	1304.30	1312.80
위 안 화 (CNH)	179.71	180.57	180.66	180.45	180.28	181.05
일 본 엔 (JPY)	902.67	907.01	909.11	905.34	903.35	906.97
유 로 화 (EUR)	1414.79	1419.85	1422.45	1427.94	1423.84	1426.55
영 국 파 운 드 (GBP)	1646.15	1656.59	1657.59	1661.13	1648.64	1655.51
캐 나 다 달 러 (CAD)	982.28	989.14	991.45	987.65	984.01	990.72
홍 콩 달 러 (HKD)	164.92	166.30	166.51	166.35	166.52	167.48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 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